

요약

글로벌 경제는 선진국에 기인한 주요 꼬리 위험(tail risk)이 악화됨에 따라 개선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도 경제 전망이 호전되고 있다. 지난 1년간 경제성과가 침체되었던 아시아는 2013년에 외부 수요가 강화되고 국내수요도 활황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약 5¾ 퍼센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소비와 민간 투자는 고용시장 활황(몇 개국에서는 실업률이 지난 몇 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과 비교적 완화적인 금융 상황에 힘입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 상황은 경기 순응적인 통화정책, 급속한 신용 확장(특히 중국과 일부 ASEAN 국가들), 그리고 2012년 여름 이후의 자본 유입 반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는 역내 수요 파급현상(spillover)의 혜택도 예상된다. 파급현상의 예로서 중국의 수요 증가와 일본의 단기 재정적 경기 부양, 그리고 ASEAN 국가들의 경우에는 최종 소비재 무역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아시아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식품 및 원자재에 대한 가격 충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은 2012년과 비교할 때 큰 폭의 변화 없이 중앙은행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범위(comfort zone)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전망의 리스크는 201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업데이트”(Regional Economic Outlook Update, IMF, 2012d) 이후 심각한 유로 지역 위기에 대한 위험이 감소했고 미국의 "재정 절벽"(fiscal cliff)이 완화된 덕분에 비교적 균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충격이 아시아의 개방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있으며 또한 지역 내부에서도 최근 수개월 동안 위험과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몇 국가의 경우 신용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융자 조건이 용이해짐에 따라 금융 불균형과 자산가격이 상승이 나타났다. 또한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고도로 통합된 공급체인 네트워크와 지역 내 수요 및 금융 의존도 증가를 고려할 때 여전히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 또는 지정학적 긴장고조로 인한 무역 중단, 경제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에 대한 신뢰 상실, 또는 중국의 예기치 않은 경기 침체를 고려할 수 있다.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은 단기적으로 금융 불균형 누적을 예방하고 정책 여력을 재구축하는 한편 성장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균형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은 불확실한 성장전망 때문에 2012년에 이미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하거나 더욱 낮추었다. 인플레이션이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부양적 정책 기조는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 불균형이 발생하면 보통 오래 지속되며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생산 수준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세에 가깝거나 약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통화정책 입안자들은 경기 과열이 발생할 위험에 대해 조기에 단호하게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필요와 방향은 실물부문의 위험요인과 과거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금융부문 안정의 위험 정도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신흥 아시아 지역의 경우 신용이 지나치게 빨리 증가하여 금융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히 지속적이고 풍부한 자본 유입이 수반되는 때에는 거시 건전성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아시아는 은행과 기업 부문의 대차대조표가 대부분 건전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완충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금융 불균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적절한 감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수요를 재조정하거나 정책 여력확충 필요성에 따라 재정 건전화의 속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구조적 재정적자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고 특히 현재의 정책하에서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재정여력 구축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건전화 정책은 대규모의 지속적인 자본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과열 압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 리스크 요인이 지난 6개월 전보다 안정되었다는 점에서 성장이 크게 둔화되지 않는 한 자동안정화 장치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여력 확충과 제도정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2장에서 강조하듯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는 동안 아시아는 과감한 재량적 조치를 취하여 경제 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기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지난 10년 동안 재정관리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재정 수입과 지출을 보다 성장 지향적으로 운영하고, 외부충격에 견고한 자동안정화 장치를 확충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모든 계층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 3장에서 언급하듯이 신흥 아시아는 중진국 수준에서 성장이 정체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실패하는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제 재조정,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강화, 상품 및 노동 시장 개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과제를 자국의 실정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